

교육정책, 국민참여로 결정한다... 국가교육위 7월 출범

교육부 관련 제정안 입법 예고
교육정책 개선 청원 요건 구체화
90일간 10만명 동의시 수립·조정

국가 교육비전과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구 ‘국가교육위원회’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90일간 국민 10만명 이상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야 한다. 30일간 20만명 이상이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을 제안하면 발의를 검토해야 한다.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교육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이상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반복할 수 없는 대통령 산하 합의제 행정기구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설치법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통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둔 국가교육위원회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과됐다.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은 총 21명이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국회가 추천하는 9명(비교섭단체 1명 포함) ▲교원단체 추천인 2명 ▲대학 협의회 각 2명 ▲시·도교육감 대표 ▲시·도지사협의회 대표 ▲교육부 차관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은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은 ▲학생은 초·

중·고교 재학생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학부모는 유·초·중·고 및 대학 자녀를 둔 사람으로 자격이 한정된다.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교원 관련 단체는 ‘교육기본법상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전국단위 교원노조’로 결정됐다.

교육기본법상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

체는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유일하다. 후자인 교원노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국립대학교교수노동조합, 함께하는 장애인교사 노동조합(장교조) 등이 있다.

또, 위원을 추천할 때 설치법에 따른 위원 자격 요건을 두 개 이상 충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급적 교원·직원 등 한 직능을 정해 추천하도록 했다. 전·현직 경력이 모두 있다면 가급적 현직 경력을 고려하도록 했다.

국가교육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개시 연도 전년도 3월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31일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국민들이 교육정책을 바꾸기 위해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도 구체화했다. 90일 동안 10만명 이상 국민의 동의가 모은 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를 도입하기 위해 공론화 등 수립·조정엔 나설 수 있다.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5분의 3 이상을 공개 모집 등 방식으로 일반 국민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다른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등 5개 이내로 두고 각 전문위원회는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통령령과 함께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입법예고됐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을 정하는 역할도 교육부로부터 넘겨받기 때문이다.

규정은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의 원칙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17명 중 절반 이상이 제안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려면 다음 달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나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앞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기초학력 협력강사, 초등 저학년 학교적응 긍정적 영향”

서울시교육청 정책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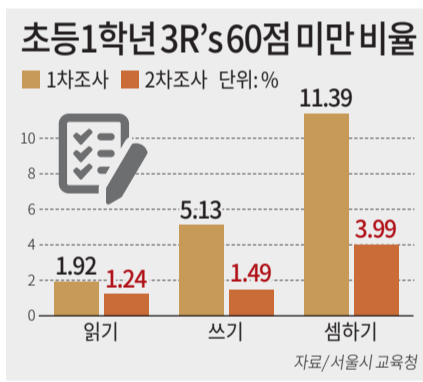
읽기, 쓰기 등 문해력 10% 이상 향상
수업참여 등 비인지적 영역 개선도

지난해 서울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담임교사 교과 수업을 돕는 ‘기초학력 협력강사’가 배치된 이후 학생 문해력이 향상되고, 학교적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사 배치 전 평균 81.18점에 머물렀던 초등학교 1학년 ‘쓰기’ 평균점수는 배치 후 90.18점까지 치솟았으며, 2학년의 셈하기 평균점수는 평균 87.98점에서 92.86점으로 올랐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2 기초학력 협력강사 지원 사업’ 정책연구 결과, 협력강사 운영이 초 1·2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 등의 인지 영역뿐 아니라 학교 적응 등 비인지적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기초학력 협력강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격수업이 장기화하면서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학력 부진이 우려되는 초 1·2학년 학



생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내 563개 공립초등학교 학급에 배치됐다. 초 1국어, 초 2수학 주당 2시간씩 최대 주당 14시간 내에서 담임교사의 교과 수업을 돕는다.

◆초 1 ‘쓰기’ 평가 점수, 강사 배치 이후 10%p 향상

‘서울 기초학력 협력강사 운영의 교육적 효과’ 정책연구에 따르면 협력강사를 지원한 초 1, 2학년 학생들의 경우 읽기, 쓰기, 셈하기 등 인지 영역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특히 쓰기 영역의 향상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배치 전 1차로 진행된 영역별 평가에서 1학년 평균점수는 ▲읽기(92.41) ▲쓰기(81.18) ▲셈하기

(78.66)였지만, 배치 후 2차 조사에서는 각각 ▲읽기(93.07) ▲쓰기(90.18) ▲셈하기(85.40)로 향상됐다.

2학년도 배치 전 평가 ▲읽기(84.05) ▲쓰기(86.14) ▲셈하기(87.98)에서 ▲읽기(90.58) ▲쓰기(95.14) ▲셈하기(92.86) 등의 변수 변화를 보였다.

이번 연구의 표집대상은 관내 66개 공립학교로, 학교당 4학급씩 총 264개 학급이다.

1차 사전검사보다 2차 사후검사에서 영역별 점수가 60점 미만인 학생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또, 전체적으로 표준편차가 낮아지며 학생들이 고른 점수대를 나타냈다.

◆사회·정서역량 및 학교적응에도 도움

2학년의 경우 사회·정서역량 및 학교적응도 등 비인지적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담임교사의 관찰에 의한 행동평가에 따르면 학교적응의 하위영역 중 학습동기, 수업참여, 과제수행도, 규칙적응 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1학년의 경우 비인지적 영역에서 변화가 없거나 학습자신감, 관계적

응 등의 점수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결과는 초등 1학년 학생들이 유·초 전환 과정에서 학교교육에 적응하는 초기의 어려움이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협력강사 운영에 대한 담임교사의 인식 조사 결과, 담임교사가 인식하는 학생과 협력강사의 상호작용이나 관계에서 1학년은 큰 변동이 없으나, 2학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협력강사 운영에 있어, 교사에게 적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일수록 인지적, 비인지적 영역의 향상도가 높게 나타났다”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사회성, 학교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기초학력 협력강사 지원 사업과 관련해 ▲협력강사 지원 사업 확대 ▲유·초 연계 강화 ▲운영사례 발굴 및 확산 등과 같은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현진 기자

광운대

김종헌 11대 총장 취임



김종헌 제11대 광운대학교 총장(사진)의 취임식이 지난 11일 오전 11시 광운대동해문 화예술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조선영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 조광식 광운대 총동문회장, 고용진 국회의원, 이승우 성북구청장, 김일복 삼육대 총장, 승현우 서울여대 총장 및 대학 교직원, 재학생 등이 참석했다.

김종헌 총장은 “1980년, 신입생으로 광운대와 인연을 맺은 후 교수직을 거쳐 오늘 이 자리에서 총장으로 부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광운대의 창학정신인 자주자립과 실천정행에 기반을 두고 미래 인재 요람이 될 참빛 인재를 양성하는 광운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

저조도 식별 CCTV 개발

세종대학교는 고성능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인공지능(AI) CCTV로 어두운 곳에서 선명하게 객체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논문을 게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열적외선 이미지와 편광 정보를 기반으로 야간 또는 저조도 환경에서 객체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복합적인 기술을 다루고 있다.

이번 기술 개발 결과를 담은 논문은 ‘LWIR 편광 특성을 이용한 조명-불변 도로탐지 및 추적’이다.

이번 연구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 TP)의 ‘공공 인프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영상보안 기술 및 시스템 개발’ 연구과제로 수행됐다. /이현진 기자

교육부 “산학연 선도 134개 대학에 6년간 2.4조 지원”

링크 3.0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산학연 협력을 고도화하고 대학과 산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134개 대학을 선정해 6년간 총 2조 4420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이하 ‘링크3.0’) 기본계획을 발표했

다. 링크 3.0은 1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 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을 잇는 3번째 산학협력 재정지원 사업이다.

교육부는 사업 선정평가를 거쳐 일반대학 75곳 내외, 전문대 59곳 내외 등 총 134개 내외 대학을 뽑아 올해 총 4070억 원을 지원하는 등 6년 간 총 2조 44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일반대와 전문대에 동일한 사업유형을 적용했던 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과 달리, 대학별 특성과 산학연협력 역량에 따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형을 구분해 지원한다.

일반대는 기술기반 산학연협력 활동을 촉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혁신선도형’을 포함하고, 전문

대는 실용기술인 등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학연협력에 대한 잠재적 역량을 갖춘 후발 대학들이 산학연협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유형인 ‘협력기반구축형’을 신설했다.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대학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1개의 사업유형을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2개 이상의 사업유형에 중복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